광주시 TF(태스크포스)팀 운영실태와 보완점

참여위원 권한 부여 '거수기' 안되게

현안·신규 시설·민원 등 팀구성 가동
장·단기 운영원칙·참여자 공모 등 필요

#지난 8월 민선 5기 출범 이후 시민과의 대화에서 강운태 시장의 지시로 상인 대표와 담당 직원 등으로 지산유원지 활성화 TF팀이 만들어졌다. 2차례 회의와 1차례의 현장방문이 이어졌지만 환경단체와 지산유원지 업주 간 첨예한 마찰 속에 소득없이 3개월이 흘렀다. 지산유원지 인근 상인들은 과거와 같은 탁상공론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지산유원지에 투자의향이 있었던 업체 역시 포기의사를 밝히고 있다.

#외부 적임자가 없어 4급 공무원이 인권담당관에 임명된 뒤 인권도시 추진 TF팀 위원들이 대폭 교체됐다. 애초 추진위원 가운데 상당수 인권전문가들을 배제하는 대신 실무진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전 의견 조율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교체해 반발을 불렀다. 해당 실과가 위원 선임의 전권을 행사하면서 불거진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민선 5기 들어 시작된 시민과의 대화와 각 현안별 태스크포스팀(이하 TF팀) 운영은 시정운영에 시민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중시하겠다는 광주시의 핵심 정책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정책이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각 실과와의 연계가 중시되고, 시민참여가 행정의 기본조건이 되면서 시청 안팎의 협의와 의견조율을 이끌어내는 TF팀 운영은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공직자들이 내부적인 논의에 의해 결정됐던 시정의 중요 사안들을 외부로 공개해 논의하면서 정책 및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TF팀이 광주시와 외부 전문가, 시민의 의사수렴 통로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담당 실·과의 운영 의지 제고, 단기·중기·장기과제별 운영 원칙 수립, 공모를 통한 참여인원 인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분야별 인재 육성 등 보완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6개 TF팀 운영 제대로 되나= 광주시의 주요 현안들은 대부분 TF팀에서 논의되고 있다. 강 시장의 지시,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신규로 구성되거나 기존 과제의 해결을 위해 구성되는 이들 TF팀은 ▲신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과거 각종 원인으로 미해결된 난제 ▲주민민원 및 주민불편 해소 ▲신규 시책 및 미래 전략 분야 등을 다루고 있다.

문화전당 박석마당 설치, 광주문화재단 설립, 시립박물관 역사문화관 건립, 야구장 건립 추진, 종합복지센터 건립·운영, 우치공원 명품화 추진, 양림산 상징타워 건립 등은 신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 있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 KTX역세권 개발지원, 주택종합계획수립, 투자진흥지구 등은 과거 여러가지 요인으로 미해결된 사안들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단 TF팀을 통해 최대한 외부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며 "경직된 공무원 조직에 신선한 충격이 되고 있으며, 일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자치행정의 또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완이 필요한 문제점=이들 현안 중에 상당부분이 담당 실과에서 이미 추진해 온 사안으로, 초안이 이미 정해진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고 각 실과에서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아닌 행정 위주의 판단으로 결론 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 TF팀도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과거 위원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답습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 TF팀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도 대부분 기존 위원회나 자문위원 등에 포함돼 있으며, 1명의 외부 전문가가 3~4곳의 TF팀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각 실과에서는 현안에 맞는 지역인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첨단 멀티미디어를 통해 주제별로 일반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보다는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나 1~2년 이상 지역 내 논쟁이 된 사안까지 TF팀을 구성하면서 TF팀이 '민원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기관이 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안까지 TF팀을 구성해 해결하려하면서 사안 자체가 장기화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TF팀 외부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예산이나 지역 내 마찰 등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경우 대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사 1하천 살리기' 출발 환경부와 광주시, 전남도는 15일 화순군 화순천 둔치에서 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발대식 직후 광주은행 직원 50여명이 하천 정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李대통령 "선거·행정구역 개편안 연내 제시"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선거구 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의 구체안을 올해 안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일본 요코하마(橫浜) 방문 중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구상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스타트하고 있었으니까, 조금 더 구체화해서 연내에 분야별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에서 사람을 뽑을 때 호남에서는 한나라당이 한 명도 안 되고 또 영남에선 민주당이 한 명도 안 되고, 부분적으로 그런 것은 모르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돼서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치개혁과 관련, "정치를 바꾸는 것도 누군가가 옛날 독재시대 같은 그런 발상으로는 안 되고 스스로 해야 한다"면서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에서 말할 것이라면, 당당하면 밖에 나와서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에 이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감세논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책의 방향은 감세해서 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쪽으로 가야 경쟁력이 생긴다"면서 "유보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인하)을 2013년에 할지 1년 더 연장할지는 그때 경제사정을 봐서 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영암 F1 외국인 관람객 6000명

당초 목표 3분의 1 불과
티켓은 7만8000장 판매

올해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를 관람하기 위해 전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애초 목표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의회가 15일 내놓은 F1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F1 대회 기간(10월22일~24일) 중 전남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6000여명으로 추산됐다. 대회 관계자 3000여명을 포함해도 9000명.

전남도와 F1대회운영법인인 KAVO가 대회 전 예상했던 외국인 관광객은 2만여명에 달했다.

F1 대회조직위원회 박종문 사무총장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에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외국인 관광객 몇 %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당초 2만명 정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F1 대회조직위원회가 관람객 숙박 대책을 내놓으면서 예상한 외국인 관람객 숫자도 2만1569명이다.

결국 애초 목표에 턱없이 못 미치는 외국 관광객도 '흥행 참패'에 한몫한 셈이다. 도의회는 이에따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능력 부재 등을 집중 추궁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경주장 건설이 지연되면서 해외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감안, 경주장 건설을 책임진 KAVO와 지원을 맡은 전남도 F1 지원본부의 안일한 대응도 따져 물을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대회 개막 3일전인 10월 18일 기준으로 예선전과 결승전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3일 전일권'의 경우 6만1815장, 토요일권 5893장, 일요일권은 1만774장 등 총 7만8052장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된 입장권 7만8052장 가운데 조직위는 6만8000여장을, 나머지 1만여장은 대회운영법인인 KAVO가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 기간 3일동안 관람객은 16만5000명으로, 자유이용권 소지자는 2만8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직위측은 "카보와 정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티켓판매액 등 정확한 집계는 추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국토부, 경남도 낙동강 사업권 회수 통보
경남도 "소송 등 방법 동원 저지" 반발

정부가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직접 하기로 하고, 경상남도에 13개 공구의 대행사업권을 회수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경남도는 그러나 법적 대응을 포함해 사업 진행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정부와 지자체 간 법정다툼으로 비화하는 것은 물론 야권과 시민단체도 반발할 것으로 보여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오전 경남도가 정부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해온 낙동강 13개 공구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지사가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이어서 임경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임채호 행정부지사를 직접 찾아가 이날 자정을 기해 협약을 해제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부산국토청장 명의의 공문에서 "작년 10월1일 '낙동강 살리기 대행공사협약'을 체결했으나 경남도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반대 또는 지연해 대행협약을 15일 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4대강 170개 공구 가운데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지자체와 사업 대행 협약을 맺은 구간은 54곳(31.8%)으로, 경남도가 맡은 곳은 낙동강 6~15공구, 47공구(남강), 48공구(황강), 섬진강 2공구 등 13곳, 1조2천억원 규모이며 준설 물량은 7천만㎥이다.

그러나 경남도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은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32.3%)이나 다른 수계 및 지자체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보다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준설 물량도 1400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이날 "법적 대응을 포함해 사업 진행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는 등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도 수자원공사 사업비를 포함해 4대강 예산에서 6조7000억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대행사업권 회수에 따른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